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윤현하늘빌딩 8층
대표전화 02-730-4755
©Amnesty International 2017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로
허용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웹사이트: amnesty.or.kr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소개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는 2016년 세계 인권 현황을 담고 있다. 서문과 5개 지역별 개괄, 159개 국가 및 영토에 대한 조사 결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분쟁, 강제이주, 차별 또는 억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증언한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 인권 보호 및 보장에 진전을 이룬 사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 차례의 검증이 있었으나, 일부 정보는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서문



서문

“2016년에는 인류의 존엄과 평등, 지구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무참히 공격받았다.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자들이 비난, 공포, 혐오의 언어로 여론을 선동했다.”

살릴 세티 사무총장

2016년은 각국 정부와 무장단체가 수많은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면서 끝없는 절망과 공포로 기억되는 한 해였다. 시리아의 대도시 알레포는 거듭되는 공습과 시가전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예멘에서는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계속됐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남수단에서는 대규모 불법살인이 일어났다. 터키와 바레인의 비판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서부터 유럽 곳곳과 미국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혐오발언까지, 2016년 세계는 더욱 암울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 가운데 의무와 행동, 발언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때로 충격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해 전 세계 난민은 그 규모와 위급함에 있어 여전히 엄청난 위기에 놓였음에도 지난 9월의 유엔 난민이주민 정상회담(UN summit for refugees and migrants)에 참석한 국가들은 끝내 적절한 대응책에 합의하지 못했다. 세계 정상들이 이러한 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안 75,000명의 난민은 시리아와 요르단 사이의 사막 황무지에 갇혀 있었다. 아

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2016년을 ‘인권의 해’로 선포했지만,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중 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선언하며 향후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켰다. 한편, 수단인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은 다르푸르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학살무기를 살포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아프리카 대륙을 활보했다.

정치계의 엄청난 사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여성혐오와 외국인혐오가 두드러지는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이미 확립된 시민의 자유를 퇴행시키고,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의 유해한 유세 연설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국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실제 또는 조작된 불만의 책임을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리며 공포와 분열의 서사에 미래 권력을 걸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도 인권 옹호에 참담히 실패한 수많은 사례를 남겼다. 그는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드론 공격 작전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밝힌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대량감시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행보에서 다국간 협력을 크게 저해시킬 외교정책과 불안정성과 상호간 의심을 증폭시키는 시대의 서막을 시사했다.

지난 한 해 벌어진 격동의 사건들을 관

통하는 중요한 서사를 찾기는 힘들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막연함만이 가득한, 매우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2017년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가치는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시기에 탄생한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인류의 존엄과 평등, 지구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무참히 공격받았다. 권력을 탐하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자들이 비난, 공포, 혐오의 언어로 여론을 선동했다.

이러한 개념을 멸시하는 시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일어났다. 시리아와 예멘에서 병원을 고의로 폭격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난민들은 분쟁지역으로 송환됐다. 전 세계가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알레포는 1994년, 1995년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과오를 떠올리게 했다.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정부가 비판세력을 잠재우고자 대규모 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와 미래의 디스토피아 상황을 그려보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시급하고도 더욱 어려워진 과제는, 인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2016년 가장 큰 문제 중 참여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안보와 경제 발전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의 공약도 있었다.

모든 지역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교묘하고 은밀한 경우도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는 그 규모와 강도가 급격히 커지고 높아졌다.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3월 2일 목숨을 잃은 것은 강력한 국가와 기업의 이익추구에 맞선 개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미주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이처럼 용기 있는 인권옹호자들은 자원 채취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인류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알리고자 노력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최근 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땅을 지키고자 한 활동으로 세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무장 괴한들이 카세레스의 자택에서 그를 살해한 것은 다른 활동가들, 특히 카세레스 보다 국제적 관심이 덜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섬뜩한 메시지가 됐다.

억압을 안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세계 전역에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오로미아 지역의 부당한 토지 몰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은 시위대 수백 명을 살해했고 정부는 수천 명을 임의로 체포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의 ‘반테러 선언’을 이용해 인권활동가, 언론인, 야당 정치인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했다.

터키는 7월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최소 90,000명의 공무원이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관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해고되었고, 언론인 118명이 미결 구금되었으며 184개 언론매체가 임의 및 영구 폐쇄되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반정부인사 탄압은 고질적이다. 이집트 보안군은 금지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평가 및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의적 체포, 강제 실종, 고문을 일삼았다. 바레인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한 다양한 혐의를 들어 비평가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했다. 이란에서는 비평가들을 구속하고, 모든 대중매체를 검열했으며, 정부와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비판을 형사기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통신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며 극심한 수준의 억압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급증하는 인도주의 위기 해결보다 비판 의견 잠재우기가 우선했다.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뿐만 아니라, 이미 확립된 시민·정치적 자유의 가치가 안보를 명목으로 은밀하게 약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새로 채택된 ‘조사권한법’은 개인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전자통신 및 데이터를 가로채고, 보관하고, 이에 접근하거나 해킹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량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사생활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다가섰다.

그러나 아마도 인권 가치를 가장 치명적으로 훼손한 것은 정부가 억압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사회문제를 특정한 “타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혐오, 분열, 인간성을 말살하는 발언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자극했다. 권력자들은 사회·경제적 병폐의 공동체 책임을 인종·종교 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전가함으로써 차별과 혐오범죄가 활개를 치도록 방관했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악화된 변종 현상 중 하나로,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살해하라는 대통령의 거듭된 공식 입장에 따라 정부가 목인하는 폭력과 자경단의 집단 살인으로 6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자칭 “반체제” 인사들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만에 대해 소위 엘리트들과 국제기구 및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은 해결 방안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실업, 고용불안,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인한 불안과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탓하기 쉬운 희생양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과 자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와 좌절의 기저에 있는 불평등과 소외의 이유 중 일부는 시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에 있다.

2016년은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난관과 위협에 맞선 사람들의 용기와 끈기, 창의성, 결의를 보여준 해이기도 했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권력 구조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국 활동가들은 정부의 조직적인 괴롭힘과 협박에도 1989년 천안문 강제진압 사건 발생일을 온라인에서 추모하며 저항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인 페이사 릴레사(Feyisa Lilesa)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은메달을 확정 짓는 순간, 에티오피아 정부의 오로모족 탄압을 알리는 몸짓을 하며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유럽 지중해 해안 지역에서는 정부의 타성과 실패를 보다 못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올리며 난민 보호에 나섰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그 전 해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민중 운동이 일어났고, 인권과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갈망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널리 알렸다.

결국 인권은 엘리트들의 몫이라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자유와 정의를 향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그리 간단히 사라질 것이 아니다. 분열과 인간성 말살의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존엄과 인간성을 확립하려는 일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이처럼 특별한 대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일명 “알레포의 광대(clown of Aleppo)”로 불리는 24세 아나스 알 바샤(Anas al-Basha)다. 그는 시리아 정부군이 끔찍한 폭격을 개시한 뒤에도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알레포에 남기로 선택했다. 결국 11월 29일에 일어난 공습으로 숨진 아나스에게 그의 형제는 “가장 암울하고 위험한 곳”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준 데 대한 경의를 표했다.

2017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세계는 급증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야말로 용기 있는 목소리, 불의와 억압에 맞서 일어날 평범한 영웅들이 필요한 때다. 누구도 혼자서 세상을 지킬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행동하며 인간성 말살에 맞설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자유와 정의의 기반이 된다. 2017년은 인권 영웅들이 필요하다.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대한민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국가 및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령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계속됐다. 비호 신청자들은 구금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인권을 행사한 이유만으로 투옥되었다. 북한의 식당 노동자 13명이 국가 시설에 구금되면서 탈북민이 남한에 도착해 정착 지원을 받는 절차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기업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뒤늦게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중국과 북한의 비난은 물론 국내 단체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켰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집회의 자유

당국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권리 행사를 계속해서 제한했으며, 주로 공공질서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2015년 11월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인 “민중총궐기”에서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당국은 2016년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관련 책임이 있는 경찰관 또는 지휘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9월 25일, 시위 중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던 농민 활동가 백남기는 10개월간의 혼수상태 끝에 끝내 사망했다.¹

백남기 부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것에 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7월 4일 민중총궐기 참여를 비롯해 다수의 집회를 공동 주최했던 한상균 위원장에게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시위 중 소수의 시위대가 불법행위를 선동한 것 등에 대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² 형량은 12월 13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시도한 또 다른 예로 들었던 것은 해군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3월 해군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건설이 지연되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4천만원을 청구했다.

표현의 자유

테러방지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이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통신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뉴스 보도,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 내용에 더욱 크게 개입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7월, 정부와 밀접한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이사회로 지명하고, 언론사를 공공연히 장악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며 본보기로 삼는 등, 정부가 언론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이용한 일련의 전략을 고발했다. 이러한 전략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 및 사드(THAAD) 관련 보도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당국은 계속해서 모호하게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투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거듭되는 탄압 때문에 해산하게 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코리아연대 활동가 김혜영은 2015년 평화적인 시위 도중 체포되어 1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³ 코리아연대의 양고은 공동대표는 6월 해외에서 동료 회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발언하려다 출국을 금지 당했고, 9월 체포되었다.

기업책무

5월 영국계 기업 래킷벤키저는 최소 95명이 사망하고,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은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수년간 한국자회사가 판매했던 가슴기 살균제와 관련해 벌어진 사건으로,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8월 보고서에서 래킷벤키저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인권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래킷벤키저에 모든 피해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자 인권

기업, 특히 건설 분야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내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독

립적이지 않고 단체교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위 “황색 노조”를 조직했고, “노조 파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노조 조합원을 괴롭히기 위해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하기도 했다.

난민과 비호 신청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0명이 넘는 비호 신청자들을 인천공항에 수개월간 억류했다. 여기에는 인천지방법원이 6월 석방하고 비호 신청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시리아 남성 28명도 포함됐다.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 온 비호 신청자 수십 명은 여전히 공항에 머물며 기본적인 생필품과 침대, 적절한 샤워실 및 위생시설, 종교적 신념에 맞는 음식 및 야외 활동 기회도 없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억류되어 있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중국 닝보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노동자 13명은 4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4개월 동안 구금되었다(‘북한’ 항목 참조). 이들의 가족은 북한 정부가 주재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원치 않게 한국에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는 가족이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연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시설 외부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일절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구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절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⁴

양심적 병역거부자

약 4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이는 국제법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전과 기록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 2015년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12월 20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237명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병무청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에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 4명이 2015년 무혐의 판결을 받은 6명에 뒤이어 승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던 2명은 검찰의 항소로 판결이 번복됐다. 10월 항소법원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한 또 다른 남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1. [온라인액션: 물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문서번호: ASA 25/4503/2016)
 2. [한국: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평화 시위 위촉 시켜](#)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16.07.04)
 3. [한국: 단식농성 중 의료지원을 거부당한 여성](#) (문서번호: ASA 25/4150/2016)
 4. [한국: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둘러싼 비밀을 공개하라](#) (문서번호: ASA 25/4413/2016)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내각 총리: 박봉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들은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사 “범죄”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엄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 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은 대부분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가 증가했다.

배경

북한 정부는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 실험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유엔은 이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로 인한 식량 부족과 생활 수준의 극심한 악화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영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상위 지배계층의 투옥과 처형 등 정치적 숙청 위험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조선노동당은 5월,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 대회에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초빙됐으나, 엄격한 통제로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8월 발생한 대홍수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추산 최

소 138명이 사망하고 69,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한 정부는 식량과 대피소, 물, 위생시설 등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잠재 공여국의 핵실험에 관한 우려로 국제 사회의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이동의 자유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탈북 소식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부 고위 인사들도 지위를 포기하고 비호를 신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월 한국 정부는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가족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4월에는 북한 정부로부터 중국 Ningbo(닝보)로 보내져 근무하던 식당 노동자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했다(‘한국’ 항목 참조).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자 북한 정부는 이들 중 12명이 중국에서 납치되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진행된 전 동료 직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중국에 있는 동안 여권을 압수당했고,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¹

탈북민들의 인터뷰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을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북한을 무사히 탈출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강제 복송될 경우 구금, 투옥, 강제노동,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인권

북한 정부는 제약, 건설, 임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을 통해 최소 5만 명 이상을 앙골라,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등 40여개국으로 파견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노동자 대부분이 국제법 또는 국내법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파견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노동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내진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렸고,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취약했다. 폴란드는 2014년 한 북한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더 이상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6월 발표했다. 몰타 역시 7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북한 정부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외국인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대학생 프레데릭 오토 워म्비어(Frederick Otto Warmbier)는 선전물 한 부를 훔치려다 ‘체제 전복’ 혐의로 3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6개월 이상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 국제 미국인인 62세 김동철은 ‘간첩’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이 선고됐으나, 북한 정부는 간첩 활동으로 의심된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

결은 지난해 초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5월 노동당대회 개최로 세계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기 이전에 나왔다.²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4곳에 최대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강제 노동, 고문과 다른 부당대우 등 제도적으로 만연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었고, 이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대부분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따라 구금되었다.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는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탐색하거나 수신하고 전달할 권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제한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신문사나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해외 소식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서 제한했다.

극소수의 해외 언론인만 북한 내 취재가 허용됐지만, 이 역시 극도로 제한되었다. 북한 정부는 5월 조선노동당 당대회에 앞서 북한을 방문했던 BBC 기자의 평양의 일상을 다룬 기사를 ‘불경하다’며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킨 채 짧은 기간 구금하고 심문하였으며 이들을 추방하였다. AFP통신은 9월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며 북한에서 활동하는 극소수의 해외 언론사 중 하나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중국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통신망에 연결된 휴대폰을 밀

반입해 이용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은 국제전화를 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중국 통신망에 연결된 밀반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관련된 모두가 강도 높은 감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간첩 활동 등 다양한 혐의로 체포와 구금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었다.³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개발된 웹사이트와 이메일 서비스에만 접속할 수 있다. 9월 서버 오류로 외부로 공개된 북한의 통신망에는 28개의 웹사이트만이 존재했으며, 모두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였다.

강제실종

2월 북한 정부는 2014년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일본과의 양자합의를 깨고,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언론은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이 이전에 완화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보위부 요원을 통해 일본인 12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다.

-
1. [한국: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둘러싼 비밀을 공개하라](#) (문서번호: ASA 25/4413/2016)
 2. [북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부친 김씨 재판, 정치적 의도 의심돼](#)
 3.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 24/3373/2016)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59개국의 2016년 인권현황을 담고 있다.

2016년은 정부와 무장단체가 다양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린 한 해였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이 총돌과 탄압을 피하고자 계속 도망쳐야 했다. 많은 쟁점 중 이 보고서는 특히 계속되는 고문과 다른 부당대우, 성과 재생산 권리 보호의 실패, 정부 감시, 과거 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화 등에 대해 기록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증언하며,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와 행동촉구를 대변한다. 또한, 인권 운동의 확장과 희망을 기대하는 수백만 명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 활동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문서이다.

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